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조영복\*

(사)사회적기업연구원장,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ybcho@pusan.ac.kr

## I. 서론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가진 제3의 경제주체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각국이 처한 실업문제,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체계, 그리고 제3 섹터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식과 정책에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공유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의 여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발전시켜 온 서구사회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기업은 (1)지속발전가능 한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2)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부산대학교(학부, 석사) 계명대학교(박사), UCLA 방문교수,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회장(2007~2008)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2007~2009), 휴먼에듀관리재단이사(2008~현재), (사)사회적기업연구원장(2006~현재), 부산대학교 교수(1990~현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2007),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경영사례(2008), 사회적기업연구원
-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등 사회적기업연구총서 3권(2009), 사회적기업연구원
-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연구(2009), 노동부

고, (3)지역사회를 재건하며, (4)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며, (5)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유용한 그릇으로 지역발전과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sup>1)</sup>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제도화와 정책추진이 뒷받침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사회적문제와 고용 없는 성장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세계의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 내의 조직들 또는 비영리조직이 새롭게 혁신된 것으로서, 기업가적 마인드와 혁신적인 경영기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의 출현배경은 국가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며 그에 따른 개념 또한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즉 유사한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보다 넓게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이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은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지만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비교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교연구 연구를 한 Kerlin(2006)에 따르면 국가마다 사회적기업으로 간주되는 조직의 종류와 활동하는 사회적, 정치적 지배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sup>2)</sup>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즉 미국은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사회적 선과 시민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으로 한정하여 협의적으로 보는 반면에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통합과 혁신을 위한 광의로 보고 있다.<sup>3)</sup>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교는 Ken Peattie and Adrian Morley(2008)<sup>4)</sup>

1) 조영복, 200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pp.24~26.

2) Kerlin, I., 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17), pp.247~263.

3) Thompson J. and Doherty B., 2006. The Diverse World of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5/6), pp.361~375.

4) Ken Peattie and Adrian Morley, 2008. *Social Enterprise: Diversity and Dynamics, Contexts and Contribution*, p.39.

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윤분배와 의사결정에 대한 특징을 포함하면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교는 <표 1>과 같다.<sup>5)</sup>

<표 1>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 비교

	미국	유럽
강조점	수익창출	사회적 수혜
일반적 조직형태	비영리	협회/협동조합
초점	모든 비영리 활동	대인 서비스
사회적기업유형	많음	적음
수혜자 참여	제한적임	일반적임
전략적 개발주도	재단	정부/EU
대학의 연구	경영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환경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
법적 프레임워크	부족	미개발이나 개선 중
이윤분배	이윤분배 원천배제	제한적 이윤분배(구성원)
의사결정	제한적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자료: 조영복, 2009,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노동부, 사회적기업연구원, p.2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활동의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에 대한 이윤배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협회나 협동조합의 사회적 수혜확대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에 대한 제한적인 이윤분배를 허용하며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에 의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기업이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NGO 중심의 사회적기업이 발달되어 있다. 정부의 개입과 지원측면에서 유럽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재단과 NGO 등 민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달성과 동시에 경제적 이윤추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윤의 배분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조합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이윤에 대한 제한적 배분이 허락되지만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NGO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한 이윤의 배분은 배제되어 있다.<sup>6)</sup>

5) 조영복, 2009,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노동부, 사회적기업연구원, p.25.

### III. 사회적기업 지원사례

사회적기업의 발전정도와 배경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각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미국보다는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것이 많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지원방안은 주로 다섯 가지 주요 유형 - 법률규정, 재정지원, 사업지원, 공조강화방안, EQUAL 차원에서의 방안 -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법률규정과 재정지원 그리고 사업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유럽 31개국 대상).<sup>7)</sup>

#### 1. 법률규정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조직들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은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특수한 법인 형태를 도입하거나, 세금 우대 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2006년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규(Regul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가 통과되었는데, 이는 이탈리아 최초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식 정의이며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규이다. 이 법규는 사회적기업, 사회 복지, 비영리적 생산 등의 정의에 관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 구조를 비롯하여 소유 구조, 회계, 합병, 인수, 직업, 모니터링, 리서치 활동, 등에 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천 계획안(2004-2006)에 의거하여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배제로 인해 위협받는 사람들의 활성화와 포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 고용정책을 위한 법률적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오스트리아 법에서는 ‘보호 작업장’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장애인을 위한 통합 고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사회적 기업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달리, 영국에서는 2005년에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를 위한 일반적인 모델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 및 독립 단체에 관한 법’에서 그러한 단체의 구조, 목표, 의무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비영리회사에 관한 법규(법 IV/2006

6) Xavier Greffe. 2003. *Innovation, Value Added and Evaluation in the Third System : A European Perspective,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OECD p.191.

7) 보다 자세한 자료는 조영복의 옮김,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2009)」와 「유럽 사회적기업 부문 정책과 사례(2009)」 참고.

제4항)로 공식적인 사회적기업 부문에 대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터키의 경우, 민법에 자선 재단 경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재단 법규’와 터키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협회, 재단, NPO 및 그 분소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협회법 No. 5253’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기업 부문의 활동을 위한 법률적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법률적 형태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조직 형태에 혜택을 주는 다양한 법률 규정들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NPO나 협회에 세금 면제나 세금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몰타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NGO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슬로베니아의 장애인을 위한 회사들은 지급한 급여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공리성’이 있는 NPO를 위한 세제 혜택은 오스트리아에서도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복지, 노인, 병자 및 장애인 간호, 보건, 직업 훈련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NPO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2. 재정지원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원방법으로, 유럽 국가들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포르투갈에는 민간 사회적 경제의 노조 및 연맹과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매년 확정되는 단위 보조금에 따라 정부가 IPSS(사회적 연대책임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제도와 IPSS 간의 공조협약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외 가정, 소외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책임의 민간 부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민간단체들이 개인화된 방식으로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기술 및 기타 물질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약을 맺고 있다. 이 보조금으로 민간 사회적기업 부문이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운용비용의 60%를 충당한다. 2002년에 3,000개 이상의 IPSS와 약 114,000여건의 공조협약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48만 명 이상의 개인이 혜택을 받았다.

키프로스에서는 취학 전 아동, 취학 연령 아동,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대상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중요한 재정 기금이 사회적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전된 자금은 결국 사회적기업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지역 탁아 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기술적 지원, 모니터링, 감독 등과 함께 연간 보조금을 받게 된다. 벨기에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환경과 직업, 재활용과 재사용, 기업가 정신 협력과 사회적 단결 분야에서 프로젝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사회부에서 자원봉사 파견프로젝트와 기본 보조금을 위한 여러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노동 정치 프로젝트 지원’ 제도로 사회적기업의 창립과 통합,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이 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목표 2-프로그램 활동 C ‘사회적기업 지원’ 내의 새로운 법률적 주체가 조성되는 전제조건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개발, 혁신, 및 품질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찾아볼 수 있다. 벨기에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위한 공인 자문 기관으로부터 받은 타당성연구, 특정 감사, 장단점 분석 등의 자문 서비스 비용에 대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NPO의 중요한 재정원은 소득세 양도 제도로, 이 제도는 모든 사람과 회사가 자신들이 지급한 세금의 2%를 공식 등록된 특정 NPO에 양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체코와 불가리아에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NPO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 루마니아는 노인,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약물 중독자 등 취약 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조 기구와 NGO에 보조금 지급과 아울러 자금 지원, 재정 지원,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은 통합고용의 개념과 연계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임금 보조금이 포함된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에서는 이 보조금이 장애인의 임금 일부를 충당하며, 금액은 장애 정도와 작업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달라지거나,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미래를 위한 계약’ 과 ‘고용부속계약’ 으로 프랑스 고용주들은 각각의 고용인에 대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보조금의 정도는 최저 소득에 달려 있으며 최저 소득자, 전과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용주가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통합 고용 기업이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이들 단체들에게 있어 중요한 재정 지원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기업 부문이 미래를 위한 계약의 54%, 고용부속계약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고용부속계약(CAE)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사회단결프로그램의 일부로써 특정 사회적·직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 계약과 함께 직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행 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협회, 통합기업, 지역당국, 공공서비스의 책임이 있는 민간 또는 준공공기관 등의 비영리 부문에 속해야 하며 해당 일자리는 충족되지 않은 집단적인 요구를 충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역사회 고용 계

획(Community Employment Scheme)’에 따라 장기 실업자의 고용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및 공익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고용되도록 하고 있다.

### 3. 사업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국가지원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의 창립과 발전과 관련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시에 나타나는 장애요인들과 최근에 시행된 ‘사회적기업법’의 잠재적인 취약점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13개의 지역 인큐베이터 즉, 창업센터가 있다. 2000년에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 정부는 창업센터 즉 지방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립, 승인 및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창업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경제 내에 기업심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적 경제 내의 예비 기업가들이 사업 아이디어의 틀을 완성하고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 정신의 원칙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는 뜻이다.

사회적기업의 창립 단계에서의 지원은 독일에서도 존재한다. 베를린 사회적기업 개발청과 이웃 경제(Neighborhood Economy, BEST)가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창업을 위한 서비스(예: 워크숍, 전문가 자문, 신용 획득 등)이다. 루마니아에서는 사회적관심센터(Social Care Centre)의 설립 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장애인을 통합 고용하는 ‘보호 가구(Protected Units)’가 40개 이상 설립되었고, 작업 요법(역주: 건강 회복에 적당한 가벼운 일을 시키는 요법)을 위한 통합 센터 10곳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센터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에 있어서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Co-Enterprise Birmingham’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사회적기업 아이디어의 연구에 있어서의 사업 지원, 사업 계획 과정에서의 도움, 마케팅 및 재무 검토, 일반적인 사업과 맞춤형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사업 자문, 사회적기업가와 경영자들을 위한 경영 교육 등이 포함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교육을 사회적 경영석사과정이라고 한다. 대학과 연수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석사과정으로 편성되거나 석사 학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의 업그레이드와 이 분야의 인식 확대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석사과정의 예가 뮌헨의 응용과학대학의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석사과정들이다(지역사회 개발 과정, 이웃 경영 과정, 지역 경제 과정).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석사 과정’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향한 첫 걸음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 이 석사과정의 참여 자격은 이민 단체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대회에서의 우승자에게 돌아간다. 스페인에서는 사회적기업 부문을 알리고 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제3섹터와 NGO와 관련한 교육, 품질, 자금, 법적 문제, 세금, 인적자원, 프로젝트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전용 웹사이트이다. 라트비아에서는 ‘NGO의 결과 중심적이고 투명한 개발’이라는 제도 아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인 출판물과 정기적인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사회적 행동 국가 서비스(National Service of Social Action, SNAS)’를 통해 인적자원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최저 소득 신청자들이 SNAS에 등록되고 다수가 노동 시장에 직업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 고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SNAS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IV.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일반적인 기업도 성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 나아가 환경적, 문화적, 윤리적 목적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기업’인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회적기업 내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sup>8)</sup>

8) 아래의 내용은 조영복, 200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 1.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시민사회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로 귀결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기업은 생소한 개념이며,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도 그 인식의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고 홍보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 사회적기업 부문에 대한 기초조사와 2)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발굴과 그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2. 사회적기업 경영전문성 강화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2)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지원이 필요하며, 3)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4) 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 3.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

사회적기업이 초창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면, 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재정적 독립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이 의존성을 줄이고 민간자원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자금확보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의 자선기금이 사회적기업에 직접적 혹은 재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1) 기부 및 모금문화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신용대출과 무상지원이 가능한 2) 다양한 금융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한 3)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4. 정책 추진 시스템 정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들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의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과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립 정도와 성장 단계에 따라 차별화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창립 시기에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과 성숙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는 한편, 간접적인 지원을 늘려 점차적으로 민간지원과 시장수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독립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간접지원은 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장기 및 저리 융자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위탁계약 등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저리 융자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투자기관 및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지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탁계약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이 되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매 및 정부용역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도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 NGO, 사회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사회적기업육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을 위한 육성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V. 결론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핵심 정책 목적 실행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발전시켜 온 서구사회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기업은 (1)지속발전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2)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3)지역사회를 재건하며, (4)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며, (5)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유용한 그릇으로 지역발전과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10년 3월 현재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모두 289개다. 그동안의 짧은 육성 기간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최초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정부의 정책은 민간수준의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정부는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은 사회적기업의 가치의 인식에서 시작되므로, 사회적기업 부문에 대한 기초조사, 사회적기업의 성과홍보,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보포털사이트 구축과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관계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부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있는 리더양성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기업내부의 긍정적 문화형성, 그리고 정부조달사업에의 참여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부문의 사회적기금조성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의한 예산의 직접적 지원,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및 사업계약의 우선권 부여와 법률, 세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사회적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휴면예금 및 복권기금 등 금융권의 자원발굴과 민간부문의 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와 민간기업

과의 연계, 소액대출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재단 및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사회적기업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사회적기업전담기구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DI**

#### 참고문헌

- 조영복, 2009,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노동부, 사회적기업연구원.
- 조영복, 2007.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 조영복곽선화 역, 2007.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한 전략(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TI)」, 사회적기업연구원.
- 조영복곽선화 역, 2007. 「사회적기업 진행보고서: 성공을 위한 전략(Progress Report on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TI)」, 사회적기업연구원.
- 조영복외 역, 2009. 「유럽 사회적기업 부문 정책과 사례」, 사회적기업연구원.
- 조영복외 역, 2009. 「사회적기업 국가별 전략과 정책」, 사회적기업연구원.
- Ken Peattie and Adrian Morley, 2008. *Social Enterprise: Diversity and Dynamics, Contexts and Contribution*.
- Kerlin, I., 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17), pp.247-263.
- Thompson J. and Doherth B., 2006. *The Diverse World of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5/6), pp.361-375.
- Xavier Greffe. 2003. *Innovation, Value Added and Evaluation in the Third System : A European Perspective,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OECD.